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5월 9일(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시설계획과	담 당 자 • 도시전략팀장 나승일 ☎440-1721 • 담당자 김민우 ☎440-172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업지역별 관리·정비 계획 마련한다

- 9일,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수립 및 정비구역 후보지 발굴 등 -

인천시가 공업지역별로 차별화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인천광역시시는 9일 시청에서 시 도시계획국장이 주재하고, 시와 각 군·구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공업지역의 토지용도가 산업·주거용으로 혼재돼 있는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관내 공업지역 67.88km² 중 항만구역 및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28.72km²가 대상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집된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를 기초로 공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공업지역을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산업혁신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지역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여건이 양호하여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공장이전적지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에 신산업 거점조성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

또 일부 공업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반시설·산업시설의 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및 산업·주거 등이 혼재돼 있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산업정비구역’으로, 대규모 공장·공공시설 이전 부지 등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산업정비구역’에는 지원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과 함께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과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혁신구역’에는 지원기반시설 설치에 더해 주택, 연구시설, 창업시설 등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의 복합개발을 허용해 노후된 공업지역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원도심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내년 9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시는 용역결과를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업지역 전경

2.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현황

<붙임1> 공업지역 전경



<붙임2>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현황

